

- 기존 소비자 후생의 개념은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 소비자의 심리적·사회적 가치에 따른 만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기적 효익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장기적 후생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
 - 소비자 후생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이익을 포함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복지의 실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봄(김시월 외, 2018)
 - 단기적 효익? 지속가능한 장기적 후생?
 -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대될 경우 후생이 증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박성용·김석철, 2010; 이유수, 2013; 한국소비자원, 2018)
- 개인의 수입이 줄고 물가가 상승함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소비자의 잉여*를 증대시키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이 선호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소비자 잉여: 지불용의(WTP:willingness to pay) 금액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뺀 것

이커머스에 대한 국내의 정책 방향

- 디지털 전환과 경기 침체라는 요인이 시민들의 소비 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소비자 후생을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부분들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는 것이 미흡함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플랫폼 시장에 대한 자율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국회와 정부 부처는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실제로 이커머스 시장은 건전하게 조성된 환경이며, 시민들의 변화하는 소비 행태를 빠르게 따라가며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플랫폼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시장 행위자들의 이야기만으로 시장을 잘못 해석한 채 발의된 경우가 상당수임(의안번호 2120047, 의안번호 2119504, 의안번호 2118227, 의안번호 2118166, 의안번호 2118054, 의안번호 2113487)
-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은 소비자 후생의 다면적 차원을 골고루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익을 점차 낮춰 전반적인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전성민(2023)은 이커머스에 대한 법적규제를 진행할 경우 행정비용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수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상품가격 전이로 이어져 소비자 잉여가 1~2조 가량 줄어든다고 보았음
 - 개인적 차원의 소비자 후생 증대는 선택권의 확대, 더 낮은 가격으로 동일 제품 공급,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현행 법적 규제의 방향성은 기업 간 경쟁의 제한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 선택권의 축소, 혁신 서비스 제공의 제한 등이 발생하여 소비자 개인적 차원의 편익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음